

의안
번호

888

울산광역시중구 2차 음식물자원화시설 용도폐지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제출연월일 : 2012. 2. 8.(수)
- 제 출 자 : 중구청장
- 위원회회부 : 2012. 2. 13(월)
- 위원회심사 : 2012. 2. 17(금)

2. 제안이유

- 2013년 1월부터 런던협약에 의거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중구 2차 음식물자원화시설 폐쇄가 불가피하여
- 공공시설 용도폐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2013년 1월부터 런던협약에 의거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중구 2차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 2012년 10월경 광역시 소각장 증설 준공과 연계하여 음식물 자원화시설 부지에 조경조성이 예정되어 있어, 광역시 요청에 의거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2012. 2. 25일 가동중단 후 용도폐지 및 매각정비코자 함.
- 2012. 2. 25일부터는 SBK(음식물 처리 및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및 시 소각장에 반입할 예정이며,
- 온산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설치 중인 『울산광역시 유기성폐기물 신재생에너지화 시설』이 2012년 12월 준공되면, 2013년부터는 중구에서 발생하는 물량을 광역시와 협의하여 본 시설 및 SBK(음식물 처리 및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에 반입 예정임.
- 2013년 『울산광역시 유기성 폐기물 신재생에너지화 시설』 가동시 광역시 공공시설 처리용량 1일 280톤(SBK 180톤, 온산 100톤)으로서,
- 광역시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1일 249톤으로 중구 2차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용도폐지 하더라도 음식물 처리가 충분하여 시설폐쇄를 결정코자 함.

● 울산광역시 구·군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현황

(단위 : 톤, 2011. 12. 31현재)

| 구 분 | 계 | 중 구 | 남 구 | 동 구 | 북 구 | 울주군 |
|--------|--------|--------|--------|--------|--------|--------|
| 연간 발생량 | 90,782 | 18,029 | 29,949 | 14,504 | 14,697 | 13,603 |
| 월 발생량 | 7,565 | 1,502 | 2,496 | 1,208 | 1,225 | 1,134 |
| 일일 발생량 | 248.8 | 49.4 | 82.1 | 39.7 | 40.3 | 37.3 |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단위 : 톤/일)

| 시 설 별 | 총계 | 공 공 시 설 | | | | 민 간 시 설 | | | |
|-------|-----|---------|-------------|----------|-----------|---------|-----------|-----------|-----------|
| | | 계 | 용연 (SBK) | 시 소각장 | 온산 유기성 | 계 | 울산 자원화 | 대건 자원화 | 그린 이엔텍 |
| 처리용량 | 644 | 504 | 180 | 224 | 100 | 140 | 60 | 30 | 50 |

※ 광역시 유기성폐기물 신재생에너지화 : 2012년 12월 준공 예정

4. 용도폐지 대상 공공시설 현황

- 사업비 : 3,904백만원(국 1,171, 시 1,366, 구 457, 민 910)
 - 보수공사비 : 945백만원(국 222, 시 259, 구 464)
- 면 적 : 부지 3,229㎡, 건물 992.22㎡(1층 731.73, 2층 260.49)
- 준공일자 : 2003년 4월 10일
- 시설규모 및 처리방식 : 80톤/일, 퇴비화
- 민자운영기간 : 2003.4.10. ~ 2009.11.27.(처리물량 181,003톤 처리)
 - ※ 운영자 : 경울산업(주) 대표이사 손병상
- 직 영 : 2009. 12. 11. ~ 현재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6. 검토의견

- 본 건 공공시설 용도폐지의 건은 중구 2차 음식물자원화시설로서
- 폐기물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비 3,904백만원이 투입된 시설물로서 2003. 4. 10. ~ 2009. 11. 27일까지 경울산업(주)에 민자로 위탁 운영되고 있었고, 2009.12.11일~현재까지 직영 운영하였음
- 2013년 1월부터 런던협약 발효로 음폐수 해양배출이 금지됨으로써 중구 2차 시설은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함
- 또한 2차 시설 관련부지는 광역시 부지로서 토지사용 무상허가 기간은 2012. 10. 24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2012년 10월경 광역시 소각장 증설준공과 연계하여 관련 시설부지에 조경조성을 목적으로 시설물 조기철거 요청을 하고 있음

○ 중구에서는 2012. 2. 25일 가동을 중단할 목적으로 공공시설(2차 음식물자원화시설) 용도폐지의 건을 제출하였음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런던협약 발효 및 부지 무상계약 기간이 도래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용도폐지의 건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부지 무상계약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고 시설장비도 10월말까지 가동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광역시에 최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대책강구와 용도폐지 후 음식물 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됨

관 련 법 령

▣ 폐기물관리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면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이란 법 제144조에 따라 조례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증설, 용도폐지·변경 및 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讓與)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법 제39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나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참 고 사 항

▣ 런던협약 주요내용

○ 폐기물의 해양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협약. 1972년 채택되어 1975년부터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에 가입해 1994년 1월부터 효력이 발효됨.

○ 폐기물 해양투기와 관련한 런던협약의 각종 규제가 2012년부터 적용됨. 이에 따라 2012년부터 가축분뇨와 하수, 2013년부터는 음폐수를 바다에 버릴 수 없음. 현재 한국은 런던협약 가입국 중 유일하게 해양에 폐기물을 버리는 나라임